

재벌·강부자 1중대 이명박

민주당 재벌·강부자 2중대

민주노동당에 표를! 진보후보에게 표를!

**이명박의 재벌·강부자
성공 시대와 18대 총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책 비교 평가
- 진보신당의

사회연대전략 비판
- 박찬숙 민주노동당

서울 서초를 후보 인터뷰
3, 5, 12면

**이명박 한 달 만에 파탄난
남북관계**

4면



현지 특별 취재
**사온주의·제국주의에 맞선
제6차 카이로회의**

15~16면

크리스 하먼
- 시장의 위기와 혁명적 대안

8~9면

**부시의 계획을 박살낸
이라크 바스라 저항**

6면

**중국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시장사회주의”의 허상(2)**

10~11면

미국 대선
- 오바마가 대안인가?

9면



**아동성범죄의 비극과
경찰력 강화**

7면

<맛볼>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맛볼> 온라인 기사

제6회 카이로회의의 이모저모
<맛볼> 특별취재팀이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6차 카이로회의의 개막식과 다양한
포럼들을 현지 취재했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어린이들부터 청소년까지 밤낮없이 혼자서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다. …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집 아이들은 학교 끝나고 갈 데가 없어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문제가 되곤 한다.”

— 이명박의 책임전가

강재섭: “[서청원은]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 오명 덮어쓸 때 대표였다.”
서청원: “강재섭도 [차떼기에] 책임있다. [차떼기 의혹] 1탄, 2탄을 계속 터뜨리겠다.” — 개싸움

“오늘이 만우절이라서 아침에 무슨 거짓말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한나라당은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한나라당에게는 매일 매일이 만우절이다.” — 손학규의 타당한 지적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무기)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 —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론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 군사적 북진(北進)을 통해 자유통일을 이뤄 내야 한다.” — 조갑제닷컴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나라 사교육 시장을 더욱 팽창시킬 가능성이 크다.” — 메가스터디. 웅진씽크빅 등 교육관련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메리츠증권

“백지처럼 하얀 학생들에게 빨간색을 칠했다.” — 국가보안법으로 김형근 교사를 구속한 검찰의 주장

“김일성을 교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당명에 김일성 이름을 넣지 않았다.” — ‘친박연대’를 비판하는 조갑제

“‘역사적 선택. 레즈비언 국회의원’이라는 프래카드를 보았다. … 저런 현수막을 보며 아이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 사회 핵심가치가 전면적으로 위협받는 느낌” — 조갑제닷컴 기자 김성욱

재벌과 강부자 1·2중대들의 진흙탕 싸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명박의 ‘재벌 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생생히 목격했다. 재벌과 ‘강부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왔다.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내각에 대해서는 통계까지 제시하며 반박 기자회견을 했지만 ‘강부자’ 내각은 전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백화점 명품관 매출은 20퍼센트나 성장했다. 한 케이블 방송은 여성의 나체 위에 초밥을 놓고 먹는 ‘알몸 스시’를 ‘1퍼센트 부자들의 트렌드’라고 방송해 논란이 됐다.

지난 1년간 고위공직자들의 79퍼센트가 재산이 늘었고, 평균 1억 6천만 원 가량 늘었다. 국회의원 재산은 평균 1억 8천만 원이나 증가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재산 증가에 급격한 가속도가 붙게 생겼다.

‘이건희 봐주기’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삼성 특검 조준웅은 ‘떡값 검사’들에 씌워진 멍에를 벗겨내고, 수조 원대의 차명 계좌를 찾아 이건희에게 돌려주고,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지작업까지 해 주며, 삼성 ‘특별변호사’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이명박의 ‘사학재벌 천국과 입시지옥’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MB 정권, 사교육 업체 더욱 성장할 듯’이라는 보고서에서 “사교육 시장이 본격적인 기업화 및 대형화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투자자들에게 메가스터디 등의 주식 매입을 권고했다.

최근 화제가 된 ‘입시명문사립 진성고 UCC’는 입시지옥의 미래를 보여 줬다. 진성고 학생들은 40인 1실의 기숙사에서 두발 규제, 소지품 검사, 편지 검열, 재단 비리와 급식비 횡령 등에 짓눌려 ‘우리는 사육이 아니라 교육을 원한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한 달 만에 권력의 정당성이 사라져 가면서 이명박은 갈수록 경찰력과 억압·통제 강화에 매달리고 있다. 어린이 납치 사건들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의 ‘서민지옥’ 정책이 낳을 빈곤과 소외는 흉악범죄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 흉악범죄를 핑계로 강화한 경찰력은 반이명박 저항을 억누르는 무기가 될 뿐이다. 등록금 집회에 동원된 2만여 명의 경찰과 대운하 반대 교수에 대한 정보과 형사 사찰이 보여 주듯 말이다.

다산인권센터도 “힘없는 여성들이 살인범에 의해 참혹히 살해당하는 동안, 집회·시위 단속에만 나서던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이 생긴다”고 했다. 사법한公安분위

기 때문에 탄압을 무릅쓰고 한총련 의장에 출마하기도 힘들 정도다.

‘1년 내내 만우절’인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거짓말 뒤에서 대재앙을 낳을 대운하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던 것도 밝혀졌다.

무법천지

이명박은 나아가 “대기업과 관련있다는 오해를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자]”며 금산 분리 폐지와 공기업 사유화라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에도 출총제 폐지, 기업 세금 인하, 한미FTA 등 ‘재벌 천국’ 공약이 한 다발이다. 반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한구는 “노동시간을 현재보다 10~20퍼센트 늘려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에선 임금 체불에 항의하던 건설 일용노동자가 소장에 맞아죽는 일도 있었다.

대표적 중소기업 CEO 안철수도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과 동일시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지만, 이미 ‘그들만의 무법천지’는 진행중이다. 차떼기 주범 한나라당과 차떼기 공범 친박연대는 연달아 돈 봉투를 뿌리다 걸렸다.

한나라당, 친박연대 등으로 분열한 이들은 ‘굶주린 10년’ 만에 되찾은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다투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추태를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구가 이명

당명·광고 모두 ‘박근혜’뿐인 친박연대 — ‘굶주린 10년’만에 되찾은 권력을 놓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

박 정부의 최대주주”라는 지역주의 악선동까지 했고, 친박연대는 당명도 공약도 광고도 오로지 ‘박근혜’뿐이다. 또 서로 “차떼기 주범”이라며 같이 누워서 침 뱉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1중대와 2중대, 차떼기 주범과 공범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물론 파병·FTA·비정규직 악법을 주도한 통합민주당에게 한나라당 견제를 바라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예고편’인 경인운하를 추진하는 통합민주당이 대운하 반대를 외치는 것도 위선적이다.

노무현 5년을 겪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이 과반이든 통합민주당이 과반을 저지하든, 어차피 둘이 손잡고 개악을 추진할 거라고 보기에 총선에 무관심하고 부동층만 늘고 있다.

한나라당 견제론은 높아 가지만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은 제자리인 것도, 지지율이 추락한 한나라당이 1백80석을 넘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총선에서 재벌·강부자 1중대인 한나라당이나 2중대인 통합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노동자당을 지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부자 정부를 도와서 재벌·강부자 국회가 추진할 ‘재벌천국 서민지옥’ 시대를 저지할 강력한 투쟁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성 차별 강화할 남교사 할당제 반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83퍼센트에 이르자 성비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남교사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남교사 할당제 지지자들은 교사의 성비 불균형이 초등학교생들의 성 역할 사회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난 십여 년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도 ‘남학생의 여성화’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차별적이고 획일적인 성 역할 모델에 기초한 교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직의 여성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많은 여성들이 교사가 되려 하는 이유

는 교사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질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대개 여성은 비정규직이거나(70퍼센트) 형편없는 임금을 받는다. 또, 출산·육아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

반면, 남성들은 교사 외에도 팬찮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교직에 매력을 덜 느낀다

(2003년 노동부 조사).

교직에서도 남녀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여교사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져 대학교 여교수의 비율은 19.3퍼센트밖에 안 된다. 초등학교에서도 높은 직위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집단을 배려해 주려는 할당제의 본래 취지에 비춰볼 때, 남교사 할당제는 의의가 없다. 이미 체계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여성들의 교직 진출을 제한하는 역효과만 낳을 것이다.

최미진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진보후보에게 투표하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총선 공약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의 시급한 개혁 과제들을 다뤘다. 민주노동당은 18개 분야 49개 민생 정책 과제를 발표했고, 진보신당도 22대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이명박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와 절망에 맞설 진보적 대안들이 가득하다.

양당 모두 한미FTA, 공기업 사유화, 의료 영리법인화에 반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명박의 대표적 삼질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에도 반대한다.

출종제 강화, 기업집단법 제정으로 거대 재벌의 횡포에도 도전하려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견회 구속 처벌과 삼성의 국민기업화도 요구했다.(다만 심상정·노회찬이라는 대표적 삼성 저격수가 당대표임에도 진보신당의 대표 공약에 삼성 비자금 문제가 누락된 것은 의외다.)

사실, 교육·의료·주택·청년 실업 등의 분야에서 양당의 공약은 거의 차이가 없다. 양당 모두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진보신당은 '맞춤형 등록금'), 기업의 재정 부담 등을 요구했다.

대학을 평준화해 학벌과 입시지옥을 해소하자는 것도 동일하다. 청년 구직자들에게 적절한 수당을 제공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양당은 1가구 1주택 법제화를 주장했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돈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의료 시장화 정책에 맞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무상의료의 초석을 놓겠다는 것도 한목소리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책과 환경 문제에서도 양당의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양당은 '민생'을 거의 배타적으로 강조하다보니 아쉽게도 반전, 반제국

주의, 국가보안법 문제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상대적으로 부차화했다.

양당의 공약에는 차이점도 있다. 우선, 진보신당은 특별히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관련기사 4면) 물론 진보진영은 당연히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지 말아야 하고 인권 억압을 분명히 비판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익의 위선에 맞서기 위해서도 그렇다.

진보적 대안

그러나 진보신당의 북한 인권 제기는 주로 민주노동당을 '종북주의'로 공격하며 차별성을 갖기 위한 것인 듯해서 진정성이 반감된다. 진보신당은 북한 인권 문제가 "진보신당이 출범한 이유이자 핵심 과제"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일심회' 관련 인사 징계 반대 결정"을 공격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정작 남한의 대표적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들을 내치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진보신당 대표공약에는 민주노동당과 달리 부유세 도입 요구가 빠졌다. 이는 분당파들이 민주노동당 내 자주파 때문에 부유세가 사라졌다고 주장해 온 것을 무색케 한다.

대신 이 자리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와 투쟁 자제를 뜻하는 '사회연대전략'

이 매웠다.(관련기사 5면)

셋째, 반제국주의 문제에서 진보신당의 문제의식은 민주노동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물론 대표 공약에서 자이툰 부대 철수를 요구했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고 한 점은 훌륭하다. 그러나 레바논 파병은 '즉각 철수'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로 유보적 태도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PKO 파병은 괜찮지 않느냐'는 식의 혼란도 엿보인다.

또,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백지화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협상 요구는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전쟁동맹 해체 요구는 빠져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는 아닌 듯하다. 진보신당 이론가들이 펴낸 《사회국가》에서는 "한미군사동맹을 무조건 폐기하자는 무책임한 주장" 대신 "자연사"를 주장한 바 있다.

남북 군사 적대가 해소되고 동아시아 안보협력을 이루면 한미군사동맹은 자연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전쟁동맹 해체 없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평화화가 가능하리라 보는 것은 공상일 뿐이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모든 해외 파병군의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도 분명히 언급했다. 그러나 한반도 군축 문제가 누락돼 있고, 제국주의를 혐소하게 이해한 결과 중국과 같은 미국 이외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한계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아직도 티베트 민중항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특구?

한편, 양당 주요 후보들이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봐야 하는데 경합이 치열하고 당선 가능성도 있는 지역에서 우려스런 타협이 눈에 띈다.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는 자신의 당이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녹색'과 어울리지 않게 녹지를 축소하고 뉴타운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심상정 후보는 "8학군, 대치동이 부럽지 않은 지역으로 덕양 교육특구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자율학교" 도입을 공약했다. 비록 그 "자율학교"가 대안학교를 추구하는 것일지라도, 평준화를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사며 그런 공약을 낸 것은 개운치 않다.

게다가 심상정 후보가 통합민주당의 대운하 반대를 위한 반한나라당 후보단일화 제안을 환영한 것도 문제다. 대운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민주당은 개악·배신의 당사자다. 더구나 이것은 '민주노동당과 열우당의 개혁 공조가 문제였다'던 진보신당 쪽의 입장과도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양당의 총선 정책은 공통점이 훨씬 많고, 몇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두 진보정당의 정책들은 이명박의 '재벌 천국 서민지옥'에 맞선 대안으로서 지지받을 만하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분당 과정에서 기성 체제의 타협 압력을 좀더 수용한 듯하다. 사회연대전략 추진, 모순적 북한 인권 제기, 반제국주의 입장의 약화가 이를 보여 준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이왕 좌파에 표를 찍겠다면 민노당이 아니라 진보신당에 표를 주라"고 권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대신 진보신당을 지지할 좌파적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진보신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전면 거부하는 이유

김하영

지난주 북한은 개성공단 경험사무소에서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하고,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젯더미” 발언을 하는 ‘연타’를 날렸다. 급기야 이번주 초 <노동신문>은 이명박을 직접 거론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이 ‘연타’를 날리기 전에는 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도발’이 이미 꽤 누적됐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군사훈련은 남한 측이 먼저 했다. 3월 초에 실시된 ‘키 리졸브’ 한미연합군사훈련에는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지스함까지 동원됐다.

미사일방어체제(MD)와 핵확산금지조약(PSI) 참가 여부도 북한이 주목하는 쟁점이다.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 뉴스>(3월 17일)는 한국이 미군에게 요격미사일 발사 장소를 제공하거나 MD 시설의 한국 배치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식의 MD 참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월 27일 유엔의 북한인권보고관 임기연장 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도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다.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타격론”이나 통일부 장관 김하중의 “북핵과 개성공단 확대 연계론”말고도,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내심을 바닥낸 일들은 더 많았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취임 첫 날부터 “북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 협력의 지평이 열릴 것”이라며 선 핵폐기 입장을 천명했다. 이런 입장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도, 그 때 이래 전지돼 온 정경분리 원칙도 무시한 것이다.

이명박의 ‘비핵 개방 3000’에는 근본적 맹점이 있다. 비핵화와 개방을 전제로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는 건너뛰고 있다.

북미 간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한 정부는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실제로, 이명박은 지난 1월 중순 북한으로부터 회동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일보> 3월 5일치)

교착

그런데 문제는 6자회담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도 대세를 이루던 낙관론은 이제 거의 자취를 감췄고, 뉴욕필의 평양 공연도 이 흐름을 바뀌놓지 못했다. 이명박이 쉽게 전제한 부분(비핵화)이 사실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얘기다. 이명박만이 몰랐던 듯하지만 말이다.

6자회담의 현 국면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에 핵 신고(2단계)를 이행했다는 것이고 미국은 신고를 받은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기괴한

일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 핵 협력 의혹을 핵 신고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는 미국의 고집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UEP와 시리아 핵확산 의혹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서로 다른 입장을 나란히 병기하는 절충안이 3월 중순에 열린 제네바 회담에서 제시됐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 내역은 핵폐기의 기준이 되므로 중요한데다, 과거 행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시인했다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두 문제에서 모두 미국은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UEP를 추구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러시아로부터 알루미늄관을 대량 수입한 것을 들이대 왔다. 그러나 미국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은 올해 초 앰허스트 대학교 강연에서 “우리는 그 알루미늄관이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고 시인했다.

시리아와 핵 협력설은 근거가 더 빈약하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

구(IAEA) 사무총장조차 북한-시리아 핵협력설을 계속 부인해 왔다. 유명한 탐사전문기자인 시모어 허시도 <뉴요커> 2월 11일치에 실린 ‘어둠 속의 공습 —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폭격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기사에서 이 의혹이 근거 없다는 것을 낱낱이 밝혔다.

그런데도 부시 정부는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는다. 특히 UEP 문제는 제2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물려설 수 없는 쟁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시 정부가 지금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당면한 관심은 폼수를 써서라도 일단 2단계를 끝내고 임기 내에 3단계(핵폐기)로 진입하는 것인 듯하다. 임기 내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의혹을 남겨둔 채 신고의 형식 절차만 마무리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미 북한은 “만일 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하고 경고했다. 불능화는 이미 꽤 진척됐지만 1년이면 재가동할 수 있다.

북한의 경고대로 핵시설 불능화 과정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사태는 원점을 향해 움직이며 교착 국면이 늘어질 수 있다. 클린턴 임기 말에 그랬듯이 부시도 시간 부족을 탓하며 권좌에서 물러날 수 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사태는 나아질까?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1994년 6월 북한 폭격을 잠시 고려했던 클린턴 부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바마도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발언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된다.”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김하영

진보신당은 “진보양당 차이[가] 뭐냐고? 바로 이거” 하며 북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북한 문제로 “진보의 재구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등 그동안 금기시돼 온 북한 쟁점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다룬다면 그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다함께’는 언제나 그래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을 공략하는 수단으로 다룬다면 잘 다루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태도는 진보신당의 안 그래도 고질적인 문제인 양비론이나 심지어 (미국과 남한보다) 북한 비판에 더 힘을 실는 잘못된 입장을 강화할 수 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나 “젯더미” 발언에 대해서도 양비론을 폈다. 원인 제공자가 이명박의 대북정책이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동맹국인 남한에 사는 진보주의자들은 미국과 남한 비판에 비할 바 없는 강조점을 뒤야 하는데도 말이다.

진보신당은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이 아니라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생활을 우선하고자 한다” 하고 주장한다.

1989년 텐안먼 항쟁 -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노동자 · 민중의 자주적 투쟁이다

그러나 그들의 북한 인권 대책을 보면 이런 관점이 얼마나 불철저한지 잘 드러난다. 진보신당은 “인권대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인권을 주제로 한 대화에 북한 당국이 나설지도 회의적이지만, 북한 당국을 “인권 억압의 주체이며 동시에 개선의 주체”로 보는 것은 더 황당하다. 진보신당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책에 북한 민중은 없다.

북한 민중의 자주적 투쟁이라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바로 진보신당 류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안고 있는 인식의 한계이다.

물론 다함께는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특히,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식의 관점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암암리에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적절하게 다루지도 못하면서 “진보 양당의 차이”가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진보신당의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북한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것을 통한 진정한 사회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다르지 않다.

‘사회연대전략’ – ‘연대’로 포장한 양보와 후퇴

전지윤

진보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뚜렷하게 가르는 핵심적 차이”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2006년 말에 처음 제기돼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문성현 당 대표, 권영길 원내대표, 진보정치연구소, 전진 등이 앞장서 주장한 ‘사회연대전략’은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가 연대하자는 그럴듯한 얘기였다.

그런데 문제는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연대’로 포장한 데 있었다. 그동안 “자본과 국가에 대한 요구로만 한정된 것”(오건호)이 문제였기에 “우리끼리의 나눔”(문성현)이 필요하다는 거였다. 고소득 노동자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자는 제안이었고, 이것은 명백히 ‘부자에게 세금을’에서 ‘노동자들끼리 뺏돌 빼서 아랫돌 끼기’로의 후퇴였다.

때문에 ‘사회연대전략’은 ‘다함께’와 좌파들의 강력한 비판과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민주노동당 5기 지도부 선거에서도 좌파인 조희주 선본이 ‘사회연대전략’을 “노동자 책임론이자 양보론”이라고 분명하게 반대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이석행 선본조차 반대 입장을 취했다. 결국 이런 좌파적 비판과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사회연대전략’은 좌초됐다.

그러나 전진, 진보정치연구소 등은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이들이 주도한 민주노동당 ‘분당파’의 “낡은 진보”와 “민주노동당” 비판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결국 진보신당 공약에서 부유세는 사라진 반면 ‘사회연대전략’이 더 강화돼서 전면에 등장했다. 원래 있었던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연 2천 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사회연대전략’을 적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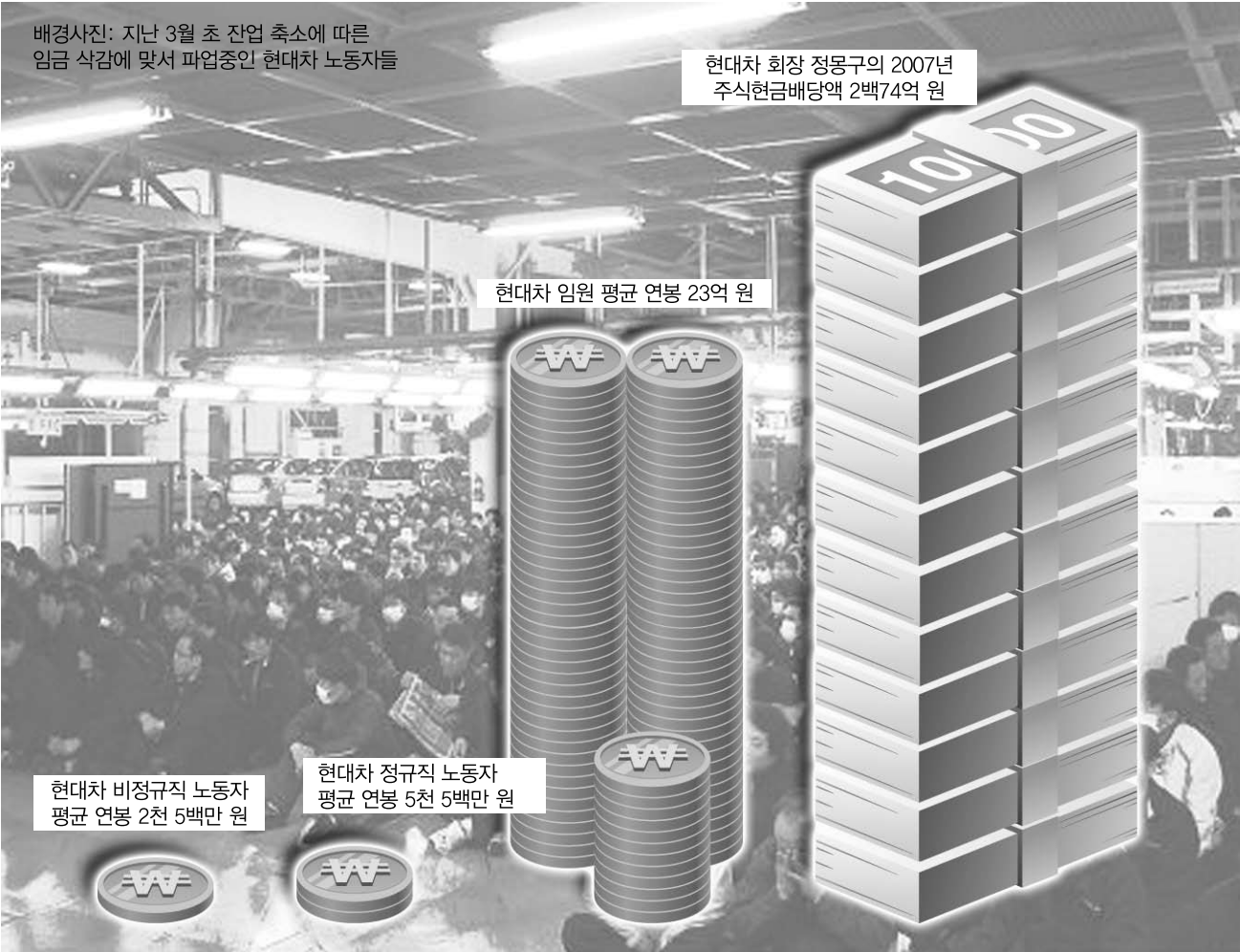
투쟁 자제

진보신당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것이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를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층도 일정한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대기업 노동자는 일정 부분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중기 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은도 “[이] 방안은 모두 그 재정의 일부를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못박았다.

이것은 투쟁 자제와 계급 타협을 뜻한다. 내 몫을 줄여달라는 요구의 투쟁은 있을 수 없고, ‘고통분담’은 노사정 타협의 고리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여름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쓰자는 타협안을 내놓으며 산별 파업을 철회했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등을 비판해 온 대표적 좌파 학자이지만 이



이런 어마어마하고 근본적 격차를 두고도 노동자들끼리 ‘양보와 나눔’을 해야 할까?

는 뜻밖에도 이런 계급 타협적 정책을 변호하고 나섰다. 오건호 전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 장상환 교수 등도 ‘사회연대전략’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이것이 “‘말로만 총파업’, ‘기자회견 연대’로 일관[하며] ... 경제주의에 매몰된 대사업장 노조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취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들이 연대 투쟁과 정치투쟁보다 자신들의 입단투에만 적극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 경제투쟁을 자제하고 양보하라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우파들도 대개 대기업 노조의 경제투쟁을 비난하면서 투쟁 자제와 양보를 요구한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기아차 노조의 투쟁은] 국내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몰고 있다. ... 기아차 노조가 진짜 국내 노동자들끼리의 동료의식을 발휘하고 싶다면 당장 자기들이 받는 임금과 대우의 일부를 비정규직 동료들에게 나눠줘 보라”하고 썼다.(1월 25일치 사설)

그러나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달프게 하는 것은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이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4년간 매년 1조~2조 원의 엄청난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비정규직을 대량해고하고 억압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대기업 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더 나은 조건은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도 끌어 올리는 효과를 낸다.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대기업 노조에게 ‘무파업’과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건 이 때문이다.

더구나 대기업 노조에서 경제투쟁의 진진은 다른 노동자들의 경제투쟁도 자극하

고, 경제투쟁의 성공에서 얻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연대 투쟁과 정치투쟁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좌파는 대기업 노조의 경제투쟁을 지지하면서 그것을 연대 투쟁과 정치투쟁으로 연결·발전시키려 해야 한다.

살을 내어주고 뼈까지 베인다

노중기 정책위원장은 또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 내놓고 중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살을 내어주고 [저들의] 뼈를 베다’는 전략”(진보신당 보도자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무지가 아니면 순진한 착각일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자가 살을 내주면 자본과 정부가 노동자의 뼈까지 베려 한 사례들로 뒤덮여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한국노총 장식촌 지도부가 “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을 위해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를 선언한 후, 이명박과 경총이 보이는 행태를 보라. 이명박 정부는 코스콤 등 비정규직 농성장을 폭력 침탈했고, 기간제 3년 연장과 파견제 무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에서 형성되는 ‘공통의 경험과 의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는 진보의 힘”이라는 오건호 전 전문위원의 주장도 옳지 않다.

‘사회연대전략’은 저소득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를 탓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험과 의식’만 낳을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는 자신의 열악한 처지가 고소득 노동자의 양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여길 것이다. 고소득 노동자는 저소득 노

동자에 대한 양보 때문에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고 여길 것이다. 지배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며 온갖 이간질을 할 것이다. 이런 분열은 결국,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약화시키는 구실만 할 것이다.

오건호 전 전문위원은 “사회연대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명박의 ‘재벌·강부자 천국’ 시대에 노동자들끼리 나누자는 주장을 ‘사회연대’로 포장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사측이 산업·특근을 줄여서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격을 시작한 지금, 임금 손해를 감수하며 산업·특근을 줄이자는 진보신당의 주장이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전진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회연대전략’을 반대해야 한다. 이명박의 재벌·‘강부자’ 천국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저들의 몫을 더 빼앗기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단결 투쟁 전략이다.

치솟는 물가 속에 임금 인상 자제를 강요당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좌파와 노동자당이 할 말은 강력한 투쟁과 연대에 나서라는 선동이지, ‘사회연대’로 포장된 양보가 아니다.

추천 소책자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김인식 외 지음

2,500원

‘사회연대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김인식 외 지음

2,500원

부시를 좌절시킨 이라크인들의 저항

사이먼 아사프 (레바논 사회주의자)

제국주의 점령이 ‘전략적 승리’를 얻고 있다는 주장은 지난주 이라크 전역에서 발생한 대중 항쟁으로 산산조각났다.

이라크 정부군은 ‘불량배’들을 소탕하기 위해 바스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본래 의도는 대중적 점령 반대 투쟁을 패배시키는 것이었다.

이라크 정부군의 공격에 분노한 수십만 명의 이라크인들은 거리 항쟁에 나섰고, 이것은 제국주의 점령 체제를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이라크 꼭두각시 정부의 취약함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이라크 정부군이 자신들을 대신해 이라크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러면 자신들은 점령군의 숫자를 천천히 줄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조지 부시는 이번 공격이 자신의 ‘증파’ 전략에서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많은 이라크 정부군 병사와 경찰 들은 명령을 거부했고 도망치거나 심지어 반란군에 합류했다.

그래서 영국 국방장관 데스 브라운은 이라크 남부에 주둔중인 영국군의 수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단결

이라크 총리 누리 알말리키는 석유가 풍부한 바스라에 대한 통제권을 마흐디군에게서 빼앗으려 했다. 마흐디군은 시아파 성직자 무크타다 알사드르가 지휘하는 대중적 민족주의 운동 조직이다.

이라크석유노조의 지도자 하싼 주마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보낸 소식에서 이라크 정부군이 바스라 빈민 거주 지역으로 진입하려 시도했을 때 단호한 저항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이라크 정부군은] 엄청난 포격을 가했고 온갖 무기를 발사했다. [그러나] 하야니아의 주민들은 영웅적으로 투쟁해서 이라크 꼭두각시 정부군이 바스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감사 밀과 치블라스의 거주민들도 끝까지 싸웠다.”

영국군은 6개월 전 자신을 바스라에서

몰아냈던 저항 세력과 결전을 치르기 위해 이라크 정부군을 훈련시켜 왔다. 이 전략은 이제 실패했다. 이라크 정부군은 저항 세력을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얻기는커녕, 이라크인들의 거대한 반란에 직면했다.

이라크인 수십만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고, 나시리야, 쿠티, 힐라, 디와니야, 아마라, 카르발라 등 남부 도시들뿐 아니라 바그다드의 시아파 무슬림 거주 지역을 장악했다.

수니파 무슬림 저항 조직들은 지난 2년 동안 이라크를 분열시켰던 종파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시아파들의 저항을 지지했다.

수니파 저항 조직들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무슬림학자연합은 성명서에서 “모든 이라크인들이 단결해서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무리들을 격퇴하자” 하고 호소했다.

지난주 토요일[3월 29일] 이라크 정부군의 바스라 공격은 큰 장애에 직면했고, 대부분의 바스라 지역이 저항 세력의 통제를 받았다. 그러자 점령군이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연합군 전투기들이 히트와 바스라에 폭격을 가해 수십 명의 이라크인들을 죽였다. 미군은 이라크 정부군의 참패를 감출 생각으로 바드다드의 빈민 지역에 포화를 퍼부었다.

마침내, 처참한 수모를 당한 말리키 정부는 이란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휴전 협상을 시작했다.

정반대

지난 일요일[3월 30일] 말리키 정부는 사드르가 반란 중단을 명령하면 전투기 공습을 중단하고 일부 포로를 석방하겠다고 제안했다. 말리키 정부는 저항 세력이 모든 무기를 정부군에게 넘겨야 한다는 원래의 요구를 철회했다. 그 날 저녁에 사드르는 부관들에게 거리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사드르는 지난해 8월에 정전을 선언했다. 그는 미국의 증파 전략의 핵심 목표인 “민병대 해체”가 사실 사드르 운동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점령군과 정

점령군과 이라크 꼭두각시 정부의 바스라 공격에 항의하는 사드르 지지자들

면충돌이 발생하면 미군 폭격기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 무차별 폭격을 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미 이라크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드르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라크의 ‘부드러운 분할’ 계획 — 이라크를 단일한 종파나 종족이 지배하는 세 지역으로 나누는 계획 — 에 반대했다. 사드르는 수니파 무슬림 점령 반대 세력과 연합하려고 시도해 왔다.

비록 휴전으로 말리키 정부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이번 항쟁은 점령 반대 정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 줬다.

점령을 지지하는 이라크 의원인 이자트 알샤흐반드는 로이터 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말리키 정부가 약화됐고, 이라크 국가의 취약함이 폭로됐다. 이제 과연 현 정부가 이라크를 통치할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조지 부시는 이번 공격이 “결정적 순간”이 되기를 바랐지만,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여성영화제에서 볼 만한 영화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http://www.wffis.or.kr>

4월 10일(목)~18일(금) 신촌 아트레온 극장

● 파티 아킨 감독의 〈천국의 가장자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급증하는 이민·이주의 문제를 터기 출신 독일인 아버지와 매춘 여성, 아들의 관계를 통해 다루고 있다.

● 알무테나 카라세도 감독의 다큐멘터리 〈메이드 인 L.A.〉는 미국 봉제공장 밀집지역에서 벌어진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세 명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투사로 변하는 과정을 담았다.

● 김선희 감독의 〈도화지〉와 공혜진·금수정 감독의 〈명랑소녀들의 합격기〉는 억압적 교육제도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 억압 문제를 다룬다.

● 〈3xFTM〉은 성전환자 호적 정정 소송으

로 알려진 한무지 씨 등 성전환자 3명이 겪은 차별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은 MTF(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여성)를 남파 감옥에 수감한 가혹 행위를 고발한다. 〈여자를 사랑한 트랜스젠더〉와 〈가족에게 커밍아웃하는 다양한 방법〉도 다양한 성 정체성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다.

● 〈이주여성영화제작워크숍〉은 강원도 횡성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직접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다.

최윤진

아이들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는 정부

정진희

이명박 정부가 혜진이 예술이, 두 아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 강화에 이용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와 경찰은 ‘범죄 예방’을 내세우며 그동안 인권단체들의 반발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조치들을 한꺼번에 꺼내 냈다.

법무부는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된 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다시 추진하고,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구금해 치료할 계획을 내놨다. 올 10월부터 시행할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제도에 이어 처벌을 더 강화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일명 ‘혜진 예술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동 유괴에 대한 부모들의 공포를 이용해 감시카메라 설치 확대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권한도 확대하려 하는데, 법원 허가 없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반경 5미터 이내까지 포착할 수 있는 위성항법장치(GPS)를 모든 휴대전화에 다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은 우리 사회를 감시 사회로 만들 뿐 범죄 예방과는 별 관련이 없다. CCTV나 위치 추적 등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CCTV의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의 내무부는 2002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CCTV의 효과는 가로등 하나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혜진이와 예술이 유괴 · 살해 사건에 이어 일산 초등학교 납치 미수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무능함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사실 이런 ‘민생 치안’에서 경찰이 무능한 것은 당연하다.

통제

경찰은 기껏해야 범죄가 일어난 뒤 대처할 수 있을 뿐,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는 없다. 게다가 경찰은 범죄의 사회적 원인 — 빈곤, 불평등, 소외 등 — 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 소외를 낳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함으로써 범죄 양산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경찰에 강력한 범죄 대책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위기에 시달리는 정부의 통제력 회복을 위해 범죄 대책을 내놓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도 드물다. ‘민생 치안’은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경찰이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좋은 구실이기도 하다.

대중의 공분을 사는 아동 대상 성범죄는 특히 좋은 소재다. 지배자들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이용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쉽게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정책이 성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사악한 개인들의 ‘추잡한’ 욕망 때문

이명박 정부는 혜진이 · 예술이의 비극적 죽음을 사회 통제에 이용하고 있다

이 아니다. 아이나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는 비뚤어진 소수가 탄생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사회가 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여성의 신체가 곳곳에 눈요깃거리로 전시되고 팔리고, 여성 비하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과 추행이 끊이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곳곳에 성적 이미지가 넘쳐나지만 성에 대해 솔직하고 개방적인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위선적인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을 인간 본연의 일부가 아니라 뭔가 ‘음탕’하고 심지어 더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

억압적 성도덕은 성학대를 낳는 주요

원인이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을 보면, 강간범과 아동 치한들은 억압적 성도덕을 지닌 종교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가톨릭 교회에서 아동 성학대가 그토록 자주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해 미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동성학대 소송 합의금 등으로 무려 6억 5천5백만 달러를 썼다. 미국의 가톨릭 성직자 4만 2천 명 중 5천 명 이상이 아동 성학대로 고소됐다.

왜곡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쉽게 성범죄의 표적이 된다. 성학대를 당해도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자신이 받은 학대를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과 소외에 따른 좌절 역시 성학대를 낳는다. 사람의 가치가 그가 지닌 부와 지위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받기 일쑤다. 유대보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립감과 지독한 외로움을 느낀다.

가난과 고된 노동, 형편없는 집 등 나날의 삶에서 겪는 고통은 사람들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앗아 간다. 아동 성학대자 중 많은 수는 그 자신이 어린 시절 학대와 성폭행의 희생자였다.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커서 아동 성학대자가 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부터 폭력적 관계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성을 왜곡시키고 인간관계를 파탄내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방식을 멈추지 않고서 성범죄를 뿌리뽑을 수는 없다. 평등과 우애, 상호협력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때만 끔찍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유물로 만들 것이다.

2004년 12월, 5살 아이가 자기집 장롱에서 굶어죽은 채로 발견됐다

은 열악한 처지 때문에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또, 입시 경쟁 격화에 따른 스트레스도 많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몬다.

경제 상황 악화는 갖가지 억압을 강화해,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자살 청소년 수가 급증했다. 2004년 생활보호대상 청소년이 93만 명으로 1997년보다 무려 2백88퍼센트나 증가하는 동안, 자살 청소년 수는 1997년 9백8명에서 2004년 2천5백6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아이들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

많은 언론이 혜진이 예술이 납치 · 살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전국의 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뒤이어 일어난 일산 초등학교 납치 미수 사건도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물론 이 사건들은 모두 매우 끔찍한 사건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처럼 우리 아이들이 처한 주된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납치돼 살해당하는 것인양 말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최대 원인은 안전사고이고, 그 중에서도 1위는 교통사고다. 2004년 14세 이하 어린이 사망자 10명 중 4.7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중 교통사고가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했다.

살인 사건으로 죽는 아이 수는 이보다 훨씬 적고, 그 중에서도 낮은 사람에게 유괴돼 살해당하는 사건은 더욱 드물다. 서구의 연구를 보면, 아동 살해의 대부분은 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저지른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의 대부분(80퍼센트)이 친

부모가 저지르는 것인 만큼, 사실 아이들이 살해되기 가장 쉬운 곳은 집 밖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다.

아이들이 처한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은 빈곤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과 배화옥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절대빈곤’에 처한 아동(18세 미만)이 1백1만 6천4백21명(8.9퍼센트)에 달했다.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소득 수준인 ‘상대빈곤’에 처한 아이들은 1백70만 1천6백59명에 달한다.

양육 부담이 개별 가정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빈곤 증가는 버려지는 아이나 아동학대를 증가시키기 십상이다. 좌절한 부모들은 종종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다. 많은 아동학대 연구는 아동학대가 실업자 등 극빈층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가정의 억압적 분위기는 많은 청소년들의 가출을 초래하는데, 가출 청소년들

광란의 시장에 대한 진정한 대안

크리스 하먼

미국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자, 자본주의 체제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던 이데올로기를 이제 불신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총재 요세프 아커만은 2주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시장의 자기치료 능력을 더는 믿지 않는다.”

영국 자본주의의 대표 신문인 <파이낸셜 타임스>의 칼럼니스트들이 미국 국가가 한 은행[메어스텝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순수한 시장 원리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을 보며 고뇌하는 모습은 놀라울 정도다.

오랫동안 신자유주의를 열렬하게 옹호해 왔던 마틴 울프도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투입이 단행된 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8년 3월 14일은 세계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꿈이 사멸한 날이다.”

고뇌하는 또 다른 칼럼니스트는 마이클 스캐핀커다. 그는 지금 사상의 현저한 변화가 진행중이고, 이것은 30년 전의 변화만큼 중요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당시 대다수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케인스주의” — 국가 개입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론 — 를 폐기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로 알려진 이데올로기 — 국가 개입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다는 주장 — 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스캐핀커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신의 독자들을 위로하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좌파나 극좌파의 웹사이트들을 검색해 보면 그들이 아직 분명한 대안을 찾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는 <소셜리스트 워커> 웹사이트를 “검색”해 딱 한 문장만을 인용했을 뿐이다.

스캐핀커가 우리의 출판물들을 진지하게 살펴봤다면 그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왔음을 알수 있었을 것이다.

모순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은 매우 간단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다양한 형태에도 불구하고 핵심적 모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 자본주의는 60억 세계 인구 대다수의 노동을 세계적 협력 체제로 통합하는 네트워크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웃만 봐도 알 수 있다. 세계 어디선가 생산된 면사 모직이 다른 곳에서 생산된 철강으로 만들어진 배에 실려 제3의 장소로 운반돼 거기서 천으로 직조되고, 다시 제4의 장소에서 옷으로 만들어지고, 석유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실

려 제5의 장소로 운반되는 등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여러분의 손에 들어온다. 가장 간단한 품목을 만드는 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네트워크들의 조직화는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간의 무자비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에 필요한 수단 — 도구, 기계, 유전(油田), 첨단 통신 시스템, 토지 — 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 소수 특권층 — 이런저런 자본가들 — 의 생산 동기는 인간의 필요 충족이 아니다. 그들은 경쟁에서 다른 자본가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생산을 한다.

경쟁에서 앞서가는 관건은 이윤을 남기고 그 이윤을 새로운 생산수단에 투자하는 것이다.

때때로 이런 투자가 실제로 대중에게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쟁업체가 소유한 기존 슈퍼마켓 옆에 새로운 슈퍼마켓을 짓는 데 쓰이거나 신약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기존 약의 판매 촉진 비용으로 쓰인다. 또, 고물이

사회를 사회주의적 방향에 맞게

재조직하려면 그런 거대 기업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투자 결정을

조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우선순위들을 이행하도록 그들을

강제해야 한다

나 다름없는 소프트웨어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업체의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사장(死藏)시키는 데 쓰이거나 다른 나라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 데 쓰인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데 쓰이거나 식품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식품을 사재기하는 데 쓰이거나 금융 투기 업체들이 주로 입주하는 값비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데 쓰인다.

그런 체제는 위기가 거듭될 수밖에 없다. 경쟁적으로 이윤을 쫓는 자본가들이 수익성이 있는 듯한, 그러나 위험한 벤처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비록 그 결과로 원로 가격이 급등하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떠받치기 위해 임금이 억제된 노동자들로서는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제품들이 대거 생산된다 해도 말이다.

계획

그런 상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은 간단하다. 자본가들의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이 경제적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흔히들 현대의 생산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주요 자본주의 기업은 모두 나름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테스코[영국 최대의 유통업체]는 매장의 상품 진열대를 채우기 위해 거리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 테스코는 모든 대형 매장에 공급할 수많은 제품을 차지없이 확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다. 마찬가지로, 닛산과 GM 같은 자동차회사들도 수많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다. 심지어 하청 부품업체들에 단가 인하 압력을 가하는 것까지도 치밀하게 계획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계획을 짜는 사람들 중에는 거대 기업의 소유자가 아주 드물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고용된 전문가들이 그들을 위해 계획을 짜 준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사람들, 자본주의 체제의 성과라고 떠들어대는 진보를 실제로 이룩한 사람들은 기업 소유자나 이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이다.

계획과 [생산 방식·기술의] 혁신이 현재 체제에서 가능하다면, 이윤을 얻기 위한 경쟁이 또 다른 경쟁으로 치닫는 체제가 아니라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체제에서도 계획과 혁신은 가능할 것이다.

사실, 오히려 그런 체제에서 계획은 더 쉬울 것이다. 지금 자본주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은 항상 경쟁 업체들의 계획 때문에 왜곡되기 마련이다.

닛산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지만, 이미 시장에는 폴크스바겐이나 도요타가 생산한 자동차들이 넘쳐난다. 테스코가 내년 상반기를 겨냥해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금융 시장의 팽목적인 경쟁에서 비롯한 위기 때문에 테스코의 제품을 소비해야 할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경쟁 때문에 옛 소련은 경제적 재앙을 맞았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결정이 없었던 옛 소련에서 지배자들의 목표는 서방

과의 군사적 경쟁에 모든 것을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마지막 20년 동안은 서방뿐 아니라 중국과도 경쟁했다. 내부의 계획이 외부의 경쟁에 종속되다 보니 계획이 그 대립물로 변해 버렸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지금 당장 모든 시장 메커니즘을 폐지하는 일에 달려들어야 하는가? 우리의 적들이 항상 떠들어대듯이,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구멍가게의 국유화”를 주장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좌우하는 것은 수많은 소규모 상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대 자본주의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재조직

사회를 사회주의적 방향에 맞게 재조직하려면 그런 거대 기업들을 통제하고 그들의 투자 결정을 조정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된 우선순위들을 이행하도록 그들을 강제해야 한다.

이 결과에 따라 경제의 덜 중요한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오늘날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사뭇 다른 것이다.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진정한 권력을 기업들이 갖고 있고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

운동에 대해 발언권이 전혀 없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생산 계획에 대한 민주적 논

쟁에 대중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대안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실현 불가능성이 아니다. 오늘날 부의 생산을 통제하고 소유한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이체방크 총재처럼 신자유주의에서 국가 개입 강화로 입장을 바꿀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경제적 권력은 끝까지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들의 체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규모 투쟁만이 체제를 끝장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그런 투쟁들은 한 나라에서 시작될 수 있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중요한 긍정적 성과들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쟁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면, 자본주의의 영향력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투쟁이 확산되며 발전하는 것뿐이다.

그래야만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새로운 생산 네트워크들이 모든 자원을 마음껏 활용해 대다수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긍정적 효과 하나는 세계의 한 지역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벌어진 투쟁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것이다.

.....
크리스 하먼은 《인턴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이고,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쉽게 읽는 마르크스주의》 등 많은 책을 썼다.

오바마는 마틴 루터 킹의 후계자인가?

켄 올랜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싶어 안달인 버락 오바마는 옛 민권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후계자를 자처한다. 그러나 오바마 선거 운동의 내용은 킹 목사의 급진주의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오바마는 킹 목사가 주도했던 운동에 빚을 지고 있다. 흑인 정치인이 미국 대통령 후보로 고려되는 사실 자체가 민권 운동의 성과다.

오바마의 선거 운동은 현재 미국인들의 변화 열망을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과 코커스 등의 출구 조사를 보면, 오바마는 여성·빈민·청년·흑인·이주민 등 이전에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광범한 지지를 얻고 있다.

오바마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오바마가 아니라 대중 스스로의 힘을 믿으라고 호소했다. 또, 오바마는 대선 예비 후보 중 처음으로 인종차별주의에 관해 발언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킹 목사의 스타일을 흉내내고 있지, 그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오바마는 민주당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분명하게 지지한다. 거의 모든 핵심 쟁점들에서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오바마는 2백만 명의 개인들이 [선거 자금] 기부했다고 자랑하지만, 그의 선거 운동은 주로 기업과 부유층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금까지 약 1억 4천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금융 엘리트에게서 받은 것이다. 오바마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 중 17명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운영자들이다. 그 중 한 명인 케네스 그라핀은 초기부터 오바마 선거 운동에 뛰어 들었는데, 그는 미국의 펀드 운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보수를 받는다.

모순된 행동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다수의 미국인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처음부터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을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말년에 미국 제국주의에 단호하게 반대했던 킹 목사와는 달리,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오바마는 이라크 점령에 무제한의 예산을 지급해 달라는 부시의 요구를 상원에서 거듭 승인했다. 또, 오바마는 아프가니스탄 병력 증파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행동을 옹호한다.

오바마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변화를 절실히 갈망하는 대중에게 어필하려 애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선 가능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절대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후보임을 기업 후원자들에게 증명하려 한다.

그래서 오바마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자신의 옛 담임 목사인 제레미 아 라이트의 인종차별주의와 제국주의에 관한 급진적 관점을 비판했다. “[제레미아는] 미국에 백인들의 인종차별주의가 광범하게 퍼져 있고, 중동의 분쟁들이 사악한 급진 이슬람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용감한 동맹들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미국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오바마는 계속 문

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다운사이징, 아웃싱, 자동화, 임금 정체, 고용에 기초한 의료와 연금 제도의 해체, 청년들이 세계경제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학교 등 흑인과 라티노[스페인어를 쓰는 라틴아메리카계 이주민과 그 후손들]가 당면한 문제들은 백인을 괴롭히는 문제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오바마는 1990년대에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이 추진했던 빈민 복지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오바마는 2006년 발간된 자서전 《담대한 희망》[국역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에서 “[클린턴] 이전의 복지 체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과 빌 클린턴의 의견이 옳았다” 하고 썼다.

대안 운동

빌 클린턴과 그의 1990년대 복지 ‘개혁’을 지지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오바마의 정책들은 거의 급진 운동보다는 민주당 주류나 기업과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좌파는 그동안 민주당이 저지른 잘못과 상관없이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좌파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안 운동을 건설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질 것이다. 킹 목사를 포함해 1960년대 운동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런 압력에 저항했다.

말년의 킹 목사는 미국 지배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자본 중 오바마의 당선 가능성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류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급진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발버둥쳐야 했고, 미국 경제는 노동자들이 진 빚으로 굴러갔다.

이제 빈민들이 금융위기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07년에만 1백50만 채의 집들이 회수됐고, 2009년까지 추가로 2백만 채가 더 회수될 예정이다.

인종차별주의는 일상적 현실이다. 흑인 실업률은 백인보다 두 배나 높다. 20~34세 사이의 흑인 아홉 명 중 한 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 또래의 평균은 서른 명 당 한 명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도전하는 운동만이 그런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당신들의 세계,

[편집자] 중국 사회주의자 천둥이 보내 온 글을 지난 호에 이어 싣는다.

천둥은 중국에서 거대한 사회운동의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중이라고 주장한다.

한계에 이른 경제 발전 모델

노동자와 농민을 쥐어짜는 것을 대가로 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 때문에 대중은 갈수록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됐고, 거대한 사회적·환경적 위기가 형성됐다.

우선, 중국의 현재 성장률은 각종 원료의 공급 부족 때문에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석유, 철, 수많은 농산품에 이르기까지 점점 수입에 의지하고 있으며 수입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농업 상황이 특히 주의할 만한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랫동안 농업을 무시해 온 결과 농업 투자액은 놀랄 만큼 감소해 왔다. 농촌 인구가 7억 명인데, 농업 투자는 총투자액의 2~3퍼센트에 불과하다. 이것이 농업 생산 낙후와 농촌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지방 관리들이 [각종 세금을] 쥐어짜면서 소농들은 갈수록 공업 발전 속도에 뒤처지고 있다.

식량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의 식량자급률은 91퍼센트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수입해야 한다. 중국 같은 인구 대국이 갈수록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과 외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연간 곡물 소비량은 현재 국제시장 연간 교역량의 두 배

나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곡물 수입 증가는 물가인상과 국내외 곡물 가격 파동을 낳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이미 시작됐다. 중국 공산당은 ‘식량이 없으면 곧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치를 잘 알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존의 길을 고수하며 위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부패

세계경제는 이미 냉각되기 시작했는데 오직 중국만 열기가 아주 뜨겁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형성돼 있다. 중앙 정부는 위기를 느끼고 끊임없이 경기를 냉각시키려 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중난하이[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주요기관, 요인의 주택이 많은 베이징의 지역 이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조롱만 들었다.

공산당은 곳곳에서 대중을 통제하지만 한 가지만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공산당은 공산당 관리들의 부패를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자산 빼돌리기를 더더욱 통제하지 못한다. 현재 당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의 ‘새로운 정치’?

후진타오 주석은 최근 위기를 느끼고 노동자와 농민 착취 정책을 약간 수정하려 한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노동계약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또, 농업세를 폐지하고 농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투자를 늘려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해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의 최저임금은 애초에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국제노동규약을 보면, 최저임금이란 최소한 그 나라 평균 임금의 60퍼센트가 돼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40퍼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기껏해야 물가인상분을 간신히 보충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농촌 투자는 이전의 2천여억 위안에서 2006년의 3천3백97억, 2007년의 3천9백17억 위안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농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6백 위안밖에 안 되고 총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0퍼센트도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연 중앙정부의 정책을 기층 정부가 실행할 것인가다.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농민들은 “중앙에서 2천억 위안을 지원해도 농민들이 받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민주적으로 감시받지 않기 때문에 중앙의 농촌 투자 자금은 횡령되거나 유용되곤 한다.

민공들 또한 아무리 좋은 노동자 보호법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그 법을 집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만 흥미를 갖는다.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파업이나 시위를 하면 지방정부는 신속하게 경찰을 보낸다.

당근과 채찍

중앙정부는 설마 이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와 농민의 정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아 왔다. 대중의 권리, 예컨대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의 자유 등은 그저 종이 위에 적힌 글자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심지어 종이에서조차 사라져 버렸다.[1982년 헌법에서 삭제됐다]

노동자와 농민이 더는 참을 수 없어 저항할 때 국가 기구의 강철군화는 잔인하게 그들을 짓밟는다. ‘딱딱한’ 강철군화 말고 ‘부드러운’ 제도적 차별도 있다. 중앙정부는 1958년 호구 제도를 통과시켜 농민의 이주 자유와 동등한 시민권을 박탈했다. 만약 중앙정부가 정말로 노동자와 농민에게 관심이 있다면 우선 그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일부 ‘신좌파’ — 사실 민족주의자 — 는 ‘새로운 정치’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의 한계는 명확하다. ‘새로운 정

(위) 허베이성 우한에서 환경오염으로 폐죽음을 당한 물고기들
(아래) 환경오염에 항의하는 샤먼 시민들의 시위
— 중국식 발전 모델은 엄청난 환경 재앙을 낳고 있다

당신들의 꿈 (2)

내 고위 관리들은 중앙정부에 자본 통제를 해제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지난해 이들은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있도록 자금 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했다.

이미 자본통제는 대폭 해제돼 지하 은행에서 매일 수익 위안의 돈이 홍콩·마카오·대만으로 불법적으로 흘러가 투자되고 있다. 중난하이 가 결국 자금 이동을 자유화했을 때 중국에서 금융 위기가 폭발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위기가 폭발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게다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주강 삼각주[광둥 등 대도시가 밀집된 연안의 공업 지역]에서 매일 민공의 파업이 일어나고 있고,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농민의 집단적 저항이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면 관료와 자본가 들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와 농민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고, 노동자와 농민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치’는 기껏해야 경제상의 미미한 개선일 뿐이고 그것이 실제로 실행될지도 알 수 없다. 노동자와 농민의 가장 절박한 요구인 정치적 권리 보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책을 뭐라고 불러야 하나? 바로 당근과 채찍이다.

노예주는 선심을 쓰며 노예에게 빵을 몇 조각 더 던져 줄 수 있지만 절대로 노예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진 않는다. 노예가 자유로워지면 노예주가 궁핍해지지 않겠는가? ‘새로운 정치’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대중이 빵 한 조각 더 먹었으니 ‘덕치(德治)’라며 소리 높여 만세를 외친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

이들이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들에겐 그들의 ‘사회주의’가 있고 그것은 바로 공산당의 ‘부권(父權) 사회주의’, 혹은 ‘독점 사회주의’다. 이러한 사회주의에서 대중은 그저 얌전히 앉아 ‘당을 믿고 정부를 믿는다’고 말해야 한다. 조용히 기다리면 지도자가 와서 당신들을 위해 줄 것이다. 만약 지도자가 자신을 위하느라 바빠 대중을 위하지 않는다면 대중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뿐!

점증하는 노동 탄압

기업주가 사주한 식칼 테러로 상처를 입은 노동권 옹호 활동가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의 생각은 예전과 달라졌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당을 믿어 왔지만, 그들의 처지는 “고달픈 수십 년 후 하루아침에 해방 전으로 돌아”간 셈이다.

노동자가 머리를 굽실거리야만 사장에게 초착취당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 땀을 쏟아 가며 일해도 임금을 못 받게 될 때, 불 같은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확실히 수동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 수출가공지역에서 파업은 더는 신기한 뉴스거리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할 수 없다면, 자생적 파업이 아무리 빈번하게 일어나도 관료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없다. 그 래서인지 지방정부 관리들도 자발적 파업을 이전만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꾸준히 유지되는 조직 없이 발생하는 자생적 파업은 금방 떠올랐다 금방 가라앉는다.

그렇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하는 한 관료와 자본가 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길 좋아 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직 건설을 촉진하려 나섰다.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을 반드시 채찍으로 다스려야 한다.

실제로 최근 정부는 노동자 지원 NGO에 대한 탄압을 늘리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광둥성에서는 많은 노동자 지원 센터가 폐쇄됐다. 그 중 일부는 홍콩 단체가 지원하는 것이고, 일부는 현지인이 개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첫째, 중산대학의 잡지 《민간(民間)》이 강제 정간됐다. 《민간》은 노동자들에게 동정적인 간행물이다. 둘째, 베이징의 《중국 발전 간보(中國發展簡報)》는 본래 아주 온건한데도 지난해 강제 정간됐다. 셋째, 잡지 《백성(百姓)》》 웹사이트와 《중국 시가(中國詩歌)》 웹사이트가 폐쇄됐다. 넷째, 신좌파라 부르는 《독서(讀書)》의 편집자 왕후이가 해직됐다.

심지어 지난해 말 홍콩 단체가 지원하는 선

전의 한 노동자 지원 센터에서 피비린내는 만행이 저질러지기도 했다. 이 센터 책임자의 아킬레스건이 신원미상의 깡패들에 의해 잘린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센터 직원들은 노동자들에게 노동계약법을 적극 홍보하면서 자본가에게 더는 속지 말라고 교육한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한 듯하다. 사고 후 센터 측은 경찰에 이번 폭력 사건을 공개 비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씩

만약 공산당이 정말 대중에게 유용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동자와 농민의 시민적 권리와 일체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악법과 사악한 세력을 뿌리 뽑아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해 줘야 할 것이다.

물론 공산당은 이럴 계획이 없다. 그러나 공산당이 파업을 금지하는데도 노동자들은 힘차게 파업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은 지금 깨어나고 있다. 그들은 점차 이 세계가 ‘자신의 세계’가 아님을, 공산당의 꿈이 ‘자신의 꿈’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힘에 의지해 단결 투쟁할 때만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는 세계를 얻을 수 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노동자와 농민이 거대한 사회운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1988년 서울 올림픽 때처럼 운동장 안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거리에서는 경찰과 민중이 충돌하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기대해선 안 된다.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썩은 지금 집요하게 땅 위로 뚫고 나오려는 중이다. 옛 경구처럼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 말라



3월 29일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집회

최근 몇몇 언론들은 3월 초 양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살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며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위험성을 부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는 살해당한 여중생을 추모한다며 ‘필리핀 불법체류 살인마 사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지역 한나라당 총선 후보는 추모의 글에서 “이제 피부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심각한 경계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인종차별주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우익 인터넷 언론 <프리존>은 한국이 “불법체류자들의 천국”이 돼서 “치안이 불안해졌고 ... 해가 지면 외출을 못할 정도가 됐으며 ... 외국인들이 난동을 피워도 출동한 경찰이 도망가야 하는 지경”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거짓과 왜곡일 뿐이다. 대부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추방·단속이 두려워 공장과 집을 오가는 것도 불안해 하고 생필품을 사러 마트를 가거나 아파서 병원을 찾기도 어렵힌다.

법무부 통계를 근거로 작성된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외국인범죄’(형사정책연구 71호, 2007)라는 논문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로 환산해 볼 때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들 출신 외국인 중 범죄자 수는 한국인 범죄자 수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악용

미등록 체류자들 대부분이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문제가 될 법한 행동은 극히 꺼릴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런 처지를 악용한 범죄에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명박은 노동부·법무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를 정확히 파악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이주노조 설립 합법화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만간 이주노동자 운동 단체, 특히 그중에서도 이주노조와 같은 급진적 부위에 대한 공격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이주노동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제 위기의 심화 때문에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더욱 경계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인구 중 소수인 외국인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계 외국인들을 마녀사냥하고 속죄양 삼는 것은 지배자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일이다. 실업, 빈곤, 범죄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에 이보다 좋은 책임 전가 대상은 없다.

이주노동자 방어는 이명박 정부에 맞선 투쟁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

이정원(이주노조 교육선전차장)

민주노동당 박천숙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권력의 심장에서 진보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서울 서초을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주노동당 박천숙 후보를 만나 이번 총선 출마의 의의와 출마의 변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원인 박천숙 후보는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했다.

한나라당의 아성인 서초구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명박이 살리겠다던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정부 출범 한 달만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을 침탈했습니다. 결국 재벌들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지 민중·서민 경제는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공공부문은 이명박이 추진할 공기업 사유화의 폭풍을 그대로 맞게 됩니다. 구조조정과 대량해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공공부문 사유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노동자·서민의 대안 세력이 누구인지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는 재벌의 심장, 권력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보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출마했습니다. 지난 5.31 지방 선거 때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이 23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당선을 목표로 할 수는 없지만 민주노동당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초구 같은 재벌의 심장에서도 노동자의 대안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더 나은 미래에서 살 권리’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습니다. 더 나은 세계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등록금·의료비·주거비 걱정 없는 세상,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제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이다 보니



이라크전 개전 5주년 집회에 참가한 박천숙 후보

핵심 공약은 ‘비정규직 없는 나라’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자녀들도 대학에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등록금 상한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 문제를 말하지 않는 정당이 평화 정당일 수는 없죠. 그래서 자이툰 철군, 상시파병법 반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견제론을 말하는데요.

오늘 노인정을 방문했는데 한 할머니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왜 맨날 싸우고 하셨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개들 걸로만 싸우지 뒤에 가선 친구야 친구. 손학규 봐.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 이렇듯 통합민주당이 견제 세력이 아님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합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을 표방하지만, [한미FTA나 파병 문제 등을 봤을 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하는 점을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자·서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만이 진정한 견제 세력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나라당 고승덕 후보는 서울대 수석 졸업하고 예일대·하버드대 나온 국제 변호사로 엘리리트고, 73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부자죠. 종부세 인하 주장 같은 것을 펼칠 게 뻔합니다. 노동자·서민을 변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는 후보 간 토론회

를 거부하는 비민주적 태도도 보였어요.

통합민주당의 김윤 후보 역시 재산이 꽤 많고 통합민주당의 정책을 따를 테니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조남호 후보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나온 전 구청장입니다. 이 분은 선명하게 종부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역시 재산이 많고요.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사실 많이 걱정했어요. 분당하신 분들이 민주노동당을 ‘종북 정당’으로 들쭉쭉 찢어놔요. 그런데 거리에서는 의외로 그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분당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몇 분 만났어요.

분당된 것은 안타깝지만 진보신당도 그쪽 나름의 가치대로 선거를 치르길 바라요. 서초구에는 진보신당 후보가 나오지 않아서 갈등은 없어요. 소속 단체의 결정에 따라 탈당하신 분들은 꽤 되지만, 서초구에 진보신당 후보가 없으니 그분들도 민주노동당을 찍겠다고 하십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누가 더 노동자·서민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지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더 좌파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속한 소비자자원노조는 만든 지 1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조합원들이 제 선거 운동에 결합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노동자들을 대변할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요.

또, 선거를 하다보면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다소 우측으로 기운 공약을 낼 수 있는데, 노동자의 원칙을 대변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 후에는 비정규직을 확대할 비정규직 악법이 확대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선 후 빨리 전선을 추스르고 비정규직 투쟁을 건설하는 한 해가 돼야 합니다.

인터뷰 · 정리 한규한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티베트 자유를 위한 국제 공동 행동

티베트 수도 라싸가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중국 정부가 3월 27일 외신기자들에게 라싸를 공개하는 도중, 티베트 승려들이 목숨을 걸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3월 29일엔 라싸에서 다시 1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국제 티베트 지지 그룹들은 이에 고무받아 중국 베이징에 올림픽 성화가 도착하는 3월 31일에 맞춘 국제 행동을 제안했고, 전 세계 84개 도시에서 티베트를 위한 국제 행동이 벌어졌다.

한국에서도 티베트를 위한 국제행동이 열렸다.

불교단체·다함께·참여연대 등 46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티베트 평화연대'가 주최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티베트 상황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티베트의 친구들'이 주최한 집회에는 임순례 감독, 한국 거주 티베트인 등이 참가해 티베트의 자유를 염원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을 고립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저항의 불씨는 살아 있다. 티베트인들의 시위에 이어 지난 3월 23일, 24일 위구르 자치 지구에서도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탄압 정책에 항의하는 1천여 명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

티베트인을 위한 연대 행동이 티베트인뿐 아니라 중국 내 소수민족과 빈부격차로 고통받는 중국 노동자·학생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

조지영



광주시청 비정규직 투쟁과 공공노조의 연대

한 달에 80만 원도 받지 못한 채 광주시청에서 3년간 일해 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둔 지난해 3월, 무더기 계약 해지를 당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1년간 출근 투쟁, 1인 시위, 단식, 노숙 투쟁, 집회 등 처절한 투쟁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 "산별노조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현장 대의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공공노조가 적극 연대에 나섰다. 공공노조



의 지원 속에 광주시청 노동자들은 광주시청 박광태가 속한 통합민주당의 대표 손학규의 종로 선

거사무소 점거 농성을 벌였다. 결국 손학규는 박광태와 면담을 주선했다.



외대 징계 철회 투쟁도 6백여 일만에 승리하다

2006년 외대노조는 2백 일 넘는 파업을 통해 박철 총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섰다. 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파업 지지 활동을 펼쳤다. 나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외대 당국은 2006년 8월, 내가 "보직교수들의 노동자 폭행·성희롱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무기정학시켰다.

그러나 지난 6백여 일 동안 "보직교수들의 노동자 폭행·성희롱"은 국가인권위·법원을 통해 거듭거듭 "사실"로 밝혀졌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법원은 "무기정학 무효" 판결을 내렸다. 외대 당국은 법원의 판결들을 무시하고 항소를 거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6일에는 "무기정학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학내 여론도 학교편이 아니었다.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조명훈 학우 징계 철회와 폭력·성희롱 보직교수 처벌'을 요구하는 연서에 절반이 넘는 30여 명의 확대운영위원(주교 회장들)이 서명했다.

결국 외대 당국은 항복 선언을 했다. "가처분 판결을 받아들여 2008년 3월 27일 정오를 기해 조명훈의 징계를 해제한다." 6백여 일의 투쟁 끝에 얻은, 소중한 승리였다.

외대 당국은 2006년 외대노조 파업 당시부터 비판 목소리를 압살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오히려 "보직교수들의 노동자 폭행·성희롱"이란 외대 당국의 치부만 만천하

에 드러났다.

또, 이번 승리는 취임 이래 외대 학생·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한 박철 총장의 첫 번째 패배라는 점도 중요하다. 박철 총장은 우파 총학생회의 도움으로 노조 파업을 짓밟은 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후퇴시켜 왔다. 지난 3년간 등록금도 70만 원이나 올랐다.

징계 철회 투쟁의 승리에 환호하는 학생·노동자 들의 마음 속엔 박철 총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 "이 투쟁의 승리가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운동의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렁찬 박수를 보내 줬다.

외대 당국은 '무기정학처분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는 철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등이 8백50여 명의 탄원서를 조직해 이 투쟁을 엄호하고 있고, 보직교수 폭력·성희롱을 입증하는 법원 판결들이 속속 발표된 상황에서 외대 당국이 "무기정학 무효" 1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고려대 출교 철회 투쟁의 승리에 이어진 외대 징계 철회 투쟁의 승리가 등록금 인상과 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을 고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조명훈



이명박의 표적이 된 알리안츠생명 노동자들

알리안츠생명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이명박의 노동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조합원들은 1월 23일 파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성과급제를 철회해 파업이 곧 끝날 것으로 기대했다. 조합원들이 파업 대오를 강고하게 유지하고, 지점장 2백여 명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측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들을 회유·협박하면서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60여 일간의 지방 거점 투쟁을 접고 3월 24일부터 파업 조합원 전원이 상경해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며 여의도 본사 압박 투쟁을 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 이영희가 이명박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파업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영희는 "지점장들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며 파업을 불법으로 몰았고, 이명박은 "[지점장들을] 설득시켜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잠시 들뜨기도 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강경 대응'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바로 지점장 대량해고를 통보해 이명박의 '설득'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 줬다.

이제 사측과 정부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하다. 이명박은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대량해고로 노동자 파업을 무력화한 사례를 집중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노조도 강력한 투쟁을 펼쳐야 한다. 단지 대오를 유지하며 시민 선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점거 등 더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과 노동부까지 나선 이상 사무금융연맹과 민주노총의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노조의 단호한 투쟁과 강력한 연대가 결합돼야 사측과 이명박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김영재

오정숙

자신감과 연대 의식이 넘쳐 흐른 카이로회의

카이로회의 특별취재팀

김지윤, 안형우, 이종길, 이현주, 장호중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점령에 반대하는 제6차 카이로회의’가 열렸다.

카이로회의 개막식에서 무슬림형제단 최고지도자는 “하마스에게 각별히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하마스는 이집트 당국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이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 점령 위기와 ... 막대한 전쟁비용, 그리고 세계적 경제 침체로 위기에 빠졌[다]”며 “세계 곳곳에서 부시를 지지하는 정권들이 패배하고 있는 지금, 국제적인 저항 세력들이 공세를 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영국 전쟁저지연합을 대표해 나온 존 리즈는 무바라크 정권에 의해 군사법정에 서게 된 40명의 진보 운동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연설을 시작했다.

“이 회의가 이토록 다양한 국제 반전 운동 세력이 참여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6년 전에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카이로에서 시작한 운동이 세계 다른 지역의 운동을 고무하고 있다. 또 이 운동은 1970년대 이래 최대 규모의 이집트 노동자 투쟁과 만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가 김광일 동지도 개막식에서 연설했다. “무바라크의 억압과 신자유주의 독재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노동자 투쟁을 지지한다. ... 우리는 조지 부시와 그 일당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저항과 함께할 것이다.” 그는 한국의 반전 시위대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을 비난하며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고 항의했음을 알렸다.

이집트를 뒤흔든 노동자 투쟁

이튿날 노동자 투쟁과 관련해 열린 두 개의 포럼은 카이로 사회포럼의 백미였다.

이집트 〈사회주의 신문〉이 주최한 ‘이집트의 계급 투쟁’ 포럼에서 ‘이집트 사회주의 연구소’의 하이삼 곱은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이라크 점령 반대 운동, 반독재 운동과 노동자 운동이 서로 고무하며 발전해 왔음을 지적했다.

“2000년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연대 운동이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났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시작되자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나섰던 모든 단체들이 전쟁에 반대해 다시 집결했다. 5만 명이 타흐리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키파야 운동(‘이제 그만’이라는 뜻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 탄생했다.(하이삼 곱)

“노동자들은 국가통제 강화에 맞서 독립 노조를 건설하고 있다. 이집트 노동자들의 반제국주의 운동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일부 공장의



무바라크의 탄압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노동자들은 이스라엘의 봉쇄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생필품을 보내 주기도 했다.”(에삼 포워드, 이집트 사회주의 연구소)

민주노동당을 대표해 참가한 김어진 동지는 20년 전 남한 노동자들이 큰 승리를 거뒀듯이 이집트 노동자들이 승리해 중동을 뒤바꾸기를 바란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자유노조와 공평한 임금’을 주제로 열린 노동자 포럼에는 섬유·철도·철강·지하철·공무원 등 각 부문의 이집트 노동자들이 참가해 메인 홀을 가득 메웠다.

마할라 파업 지도자는 “공장에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정권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

고 있음을 알렸다. 세무 공무원 노동자 대표는 “바로 마할라 노동자들에게 배워”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리스와 영국에서 온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국제적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집트 학생 운동이 부활하고 있다”

셋째 날 열린 학생운동 포럼 행사장은 이집트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찼고 3분의 1 이상이 여학생들이었다. 무슬림 여성이 수동적이라는 편견은 산산조각났다.

학생운동을 지지하는 교수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학생들은 다양한 운동과의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사회자는 최근 승리한 남한의 출교생 소식도 소개했다.

이집트는 얼마 전까지 무상교육이었지만 무바라크 정부는 대학 사유화를 추진하고 등록금과 교육비를 크게 올려놨다. 이집트 노동당(2000년 정부에 의해 해산된 개량주의 이슬람 정당) 학생위원회 연사는 “가난한 학생들은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교수들의 투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올해 초에 우리 교수들은 대학 개혁을 위한 호소문을 돌렸다. 무슬림 형제단과 ‘사회주의 학생’이 반응을 보였다. 우리는 단결해서 싸우기 시작했고 다 른 대학들이 가세했다.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사회주의 학생’의 연사는 “학생들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4월 6일에 있을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면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예루살렘을 해방시키려면 이집트를 해방시켜라”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의 전략을 다룬

이집트 사회주의 연구소 주최의 포럼 ‘시온주의 반대 투쟁은 어디로’에서 후니엔 라할(헤즈볼라 공보관)은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평화롭게 공존했다. 우리는 공존은 인정하지만 제국주의적 유대 국가 건설, 즉 시온주의에는 반대한다.”

저명한 팔레스타인 출신 활동가 가다 카르미는 ‘두 국가 방안’[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따로 국가를 만들자는 입장]이 아니라 ‘1국가 방안’[이스라엘을 해체하고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사는 하나의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자는 입장]만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알렉스 캘리코스는 1국가 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지적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영웅적이지만 그들의 힘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잘못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이스라엘이 강요하는 상황 때문이다. 2006년 헤즈볼라의 승리는 매우 중요했다. 팔레스타인 바깥의 강력한 저항 세력이 [팔레스타인 편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는 이집트 노동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의 투쟁이 팔레스타인 투쟁과 결합되면 1국가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이라크 점령의 진실과 반전 운동의 과제

‘이라크 : 점령 하의 인도주의적 재앙’ 포럼에서 한 연사는 점령 하의 이라크 현실을 각종 통계를 통해 보여 주며 미국이 종파 간 분열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레바논에서 온 활동가는 “이라크 저항 세력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때때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점령이 낳은 결과다. 분명한 진실은 이라크인들 대다수가 저항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고 말했다.

카이로회의 부의장 존 리즈는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세계 제1의 군사 강국이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쇠퇴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측면이 결합해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했다”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 배경을 지적했다.

압도적인 군사적 능력과 경제적 취약성 사이의 모순이 심화할수록 위기에 처한 제국은 확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영국 전쟁저지연합의 크리스 나인햄은 이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이란, 시리아, 레바논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매우 실질적이다. 국제 반전 운동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한국의 반전 활동가 김광일 동지는 반전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나 민주당 후보 어느 누구도 이라크 점령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반전 운동 세력은 저항을 계속해야 한다.”



맹활약중인 카이로회의의 한국인 참가자들

미국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점령에 맞선
제6차 카이로회의

파업 물결 한가운데서 개최된 카이로회의

카이로회의의 특별취재팀 — 장호중

1940년대 이래 가장 강력한 노동자 파업 물결이 강타하고 있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미국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점령에 맞선 제6차 카이로회의가 열렸다. 1천5백여 명의 참가자 중에 노동자·농민·학생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이번 카이로회의는 중동과 전 세계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이집트 현지의 저항과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다.

전국적 노동자 투쟁의 기폭제 구실을 한 마할라 섬유 노동자들은 오는 4월 6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다시 점거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의 투쟁은 이집트 노동자 전체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했고 이미 지난해 이들이 커다란 승리를 거둔 데 고무된 다른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카이로회의에 참가한 중동의 저항세력과 전 세계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 단체 들은 이집트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의 인사를 보냈다.

이집트 당국이 하마스 관계자의 입국을 금지했지만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대표해 무함마드 나잘이 카이로회의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경 수비대가 저항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폭정과 착취에 맞선 여러분의 투쟁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집트 섬유 노동자 연맹의 핵심 활동가인 게하드 탐만은 국제 연대에 감사 인사를 보냈다. “파업에 대한 국제적 연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연대는 우리가 [지난해 파업을] 6일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고무했습니다.”

국제 연대

미국 제국주의와 시온주의에 맞선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도 이집트 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과 만나고 있고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도 다시 전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마할라 노동자들은 카이로 국경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로 들어왔던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표하고

지원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가자 봉쇄에 동참하고 있는 이집트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분노 속에서 반독재 투쟁과 반제국주의 투쟁이 자신감을 얻고 있다.

군사독재 정부에 맞선 투쟁과 노동자들의 파업이 서로를 고무하는 이집트의 지금 상황은 마치 지난 1987년 남한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재현되는 듯하다.

7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집트의 ‘경제 기적’은 이집트인 대다수의 빈곤을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다. 국영 빵배급소 앞은 주식인 빵을 구하려고 몰려든 흥분한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 빵값 인상 때문에 생겨난 이같은 패닉 사태는 이집트의 사회적 위기가 첨예해지고 있다는 징후의 하나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무원들의 투쟁으로 확산한 것이나 의사나 교수 등 중간계급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어용노조를 대체할 독립노조 건설 투쟁도 벌이고 있다.

무바라크 정부와 미국 제국주의에게



가장 끔찍한 사실은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이집트 노동자들이 단지 경제 투쟁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카이로회의에 참가한 전 세계 반전·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은 이를 더욱 촉진했고 이집트 노동자들은 한동안 더 전진할 듯하다.

» 관련 기사 15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삼성을 무릎 꿇리다!



이제 삼성의 이견회가 피눈물을 흘리게 할 차례다

정종남

삼성SDI에서 해고된 사내하청 여성 노동자들이 복직투쟁 1년 만에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사측이 하이비트 노동자들을 포함해 비정규직 24명을 전원 재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견회 반대 시위로 출교된 고려대생들의 통쾌한 승리에 연이은 이번 승전보는 삼성에 맞선 투쟁에 서광을 비추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사직서 강요에 맞서 40여 명의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사측이 회사 문을 닫고 노동자들을 쫓아내면

서 이 투쟁이 시작됐다. 삼성은 이 투쟁이 다른 노동자들을 자극할까 봐 초강수로 나왔는데, 여성 노동자들의 불굴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납치·감금·폭행을 일삼는 삼성의 악랄한 탄압을 떠올리면 이번 승리가 더욱 빛난다.

싸움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여겼다. 하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삼성SDI 정규직들도 “저들처럼 싸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며 술렁였고, 응원해 줬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지난해 12월에 1

천5백여 명이 참여한 연대 파업을 조직해 공장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복직을 요구했다.

이 투쟁으로 비록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이 구속됐지만, 금속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야말로 이번 승리의 밑거름이었다.

하이비트 노동자들은 삼성 비자금 사태 항의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각종 토론회와 삼성 본관 앞 시위를 통해 노동자 탄압 사례를 폭로하며 삼성을 궁지로 몰았다.

이번 승리는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서 투쟁하는 투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원정회사인 삼성SDI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수많은 전국의 하청 노동자들을 고무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승리는 이명박 시대에 장기투쟁중인 노동자들에게 큰 힘을 줄 것이다.